



통합시장 후보에 듣는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시·도민 간절한 염원이 광주전남통합 '새 역사' 썼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시갑)은 3월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지역민들의 대도약을 향한 간절한 염원과 뜨거운 응원이 새로운 역사를 썼다”며 “호남의 위대한 힘을 다시 한번 느낀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출범하면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고 시장이 넓어지며 기업투자가 늘어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라며 “생활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시·도민 누구나 수준 높은 복지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6월 지방선거에서 선출할 초대 통합특별시장 경선에 출마한 데 대해 “행정과 정치 양면에서 검증된 경험과 역량을 보여준 제가 ‘하나 된 전남·광주’의 대도약을 이끌어갈 책임자라고 감히 자부한다”고 밝혔다.

### 수도권 일극 극복... '규모의 경제'로 선순환 구조 만들어져 광역철도·도로망 촘촘... 생활편의·복지 획기적 개선될 것 행정·정치 '검증된 역량'으로 초대 통합특별시장 도전할 터

조했다. 현재의 턱없이 열악한 전남동부청사를 기능이나 규모 면에서 통합특별시의 대표 청사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특별법안 제57조에 따라 '균형발전기금'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동부권 등 상대적으로 인프라 투자가 시급한 곳에 재원이 우선 배분되도록 제도화했다.

이런 조치 외에도 지난달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동부권을 대한민국 산업과 에너지 대전환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비전도 발표했다. 특히 통합특별시의 재원 중 일정 비율을 매년 의무적으로 투입하는 '가칭' 동부권 지원발전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해서 동부권의 산업전환, 인프라 확충, 지역경제 회복에 우선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도시나 첨단 산업 분야에만 집중됐다는 지적이 있는데, 통합 이후 농어촌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대책이 있다던.  
△ 도시와 농어촌이 함께 성장하지 못하는 행정

통합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통합특별법에는 전남·광주의 농어촌이 뒤처지지 않도록 자생력을 부여하고 도농 격차를 줄이기 위한 특례들을 담았다. 우선 '농촌활력촉진특구' 제도를 도입해 농촌지역에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했고, 농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도 마련했다. 평생 농업에 헌신한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의 법적 근거도 담았다. 해양수산 분야와 어민들의 삶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해수부가 보유한 해양수산 분야 권한들이 통합특별시로 대거 이양되고, 낡은 수산업체를 첨단화하기 위한 '스마트수산업 선도지구 지정'과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첨단 수산물 수출 전문단지 조성 특례도 마련했다.

- 통합특별시의 농어촌에 대한 지원 대책이 있다던.  
△ 통합특별법에 더해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몇 가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농어가

기본수당을 2배 인상하고, 햇빛연금을 통합특별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전남은 연 70만원의 농어민수당을, 광주는 연 60만원의 농민공익수당을 도·시와 시·군·구가 분담해 지급하고 있는데, 가구당 월 5만원 남짓의 지원으로는 생존 위기에 놓인 농어촌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를 연 120만원의 '농어가 기본수당'으로 통합·인상해 지역화폐로 매월 지급하고, 재원은 통합특별시가 80%를 부담해 시·군·구의 재정 부담을 대폭 낮출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연 5조원의 통합인센티브 중 일부로 햇빛연금 마을을 조성해 주민들께 돌려드려야 한다. 이처럼 농어가 기본수당과 햇빛연금 배당으로 도시와 농어촌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구축해 가겠다.

- 전남 동부권의 석유화학 및 제철 산업의 위기가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경쟁력 강화 방안은.

△ 행정통합특별법에는 국가기간산업인 석유화학 및 제철 산업의 부활을 위한 강력한 특례 조항들이 마련돼 있다. 통합특별시의 석유화학산업에 대해 공정 고도화와 고부가 전환, 산업전환 과정에서의 고용 안정 및 인력 재교육 사업 등을 지원하도록 했고, 철강산업에 대해서도 저탄소철강특구를 지정해서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 촉진을 지원하도록 했다.

행정통합과는 별개로, SMR(소형모듈원자로) 중에서 고온가스로(HTR)를 조기에 실용화하는 일이 시급하다. 석유화학의 나프타 분해나 철강의 환원제 생산 공정에는 막대한 산업용 열과 수소가 필요한데, 현재는 이를 화석연료로 충당해 경제성이 떨어지고 탄소배출이 불가피하다. 탄소배출 없이 고온의 열과 수소를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고온가스로를 조기에 실용화해서, 여수와 광양 국가산단에 도입하면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22대 국회가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있는데, 그간의 활동 성과들을 꼽는다면.

△ 임기 초반부터 느닷없는 윤석열 내란이 발발하고, 대통령 탄핵에 이은 조기 대선 승리와 정권 교체까지 쉼 없이 달려오니 2년 가까운 시간이 눈코 뜰 새 없이 지나갔다. 가장 기억에 남고 보람을 느끼는 일은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헌정 질서 수호에 앞장선 일이다. 이재명 당시 당 대표가 저를 최고위원으로 지명해 당 지도부에서 활동하며 12·3 내란의 국가적 위기를 국민과 함께 극복하고, 윤석열 탄핵을 이끌어 내며 내란 정권을 종식하는데 앞장섰다. 아울러 전남도당위원장을 맡아 대선 선거운동을 진두지휘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헌신할 수 있었다. 전남이 전국 1위인 85.87%라는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하며, 정권 교체와 대선 승리를 견인했다.

입법 활동의 결실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을 대표발의 해 제정했고, 이를 통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위기를 극복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총선 1호 공약이었던 '여수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선정'을 달성하며 여수시가 총사업비 1조980억원 규모의 해수부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로 최종 선정된 것이다.

- 6월에 선출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 출마했는데, 본인만의 강점은.

△ 30년 공직 경험을 살려서 고향에 봉사하기 위해 귀향해 민선 6기 여수시장으로 당선된 후 여수를 연간 1300만명 이상이 찾아오는 대한민국 대표 해양관광도시로 우뚝 세웠다. 21대 국회 이후 6년간 국회 농해수위에서 활동하며 농어촌 소멸을 막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민주당 인권위원장과 최고위원, 전남도당위원장을 맡아 이재명 당시 당 대표와 함께 윤석열 내란정권을 종식하고 4기 민주정권 수립에 온 힘을 다했다. 윤석열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 국면에서는 최고위원직을 스스로 내려놓고 전남도당위원장에 전념한 결과, 전남이 85.87%라는 전국 최고 득표율을 달성하도록 견인하며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앞장섰다.

이처럼 행정과 정치 양면에서 검증된 경험과 역량을 보여준 제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초대 시장을 맡아, '하나 된 전남·광주'의 대도약을 이끌어갈 책임자라고 감히 자부한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주철현 의원은 지난해 1월 31일 전남도당위원장으로 민주당 대선 승리에 전념하기 위해 최고위원회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마지막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당시 당 대사진제공=주철현의원실



주철현 의원은 지난 1월 여수시민회관에서 열린 '전남·광주 행정통합 여수지역 대토론회'에서 청중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주철현의원실



주철현 의원은 지난해 5월 30일 국회 한-우크라이나 의원친선협회장으로서 포드 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와의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주철현의원실

-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통과한 소감은.

△ 마침내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남과 광주가 하나 돼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출발점으로, 가슴 벅찬 감동을 억누를 길이 없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병폐인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 가장 든든한 동력은 바로 전남과 광주의 시·군·구민 여러분이었다. 전남과 광주의 대도약을 향한 간절한 염원과 뜨거운 응원이 국회를 움직이며 새로운 역사를 썼다. 하나 된 호남의 위대한 힘을 다시 한번 느낀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지역민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 우선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다. 전남과 광주의 통합으로 인구 320만의 거대 경제권이 탄생하면, 수도권에 이은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축이라는 확고한 위상을 갖게 된다. 규모가 커지면 시장이 넓어지고, 기업 투자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또 산업 생태계가 완벽히 결합한다. 전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영도, 동부권의 석유화학·철강 등 국가기간산업과 우주항공 산업이 광주의 AI(인공지능)·첨단 모빌리티 산업과 결합해 강력한 시너지를 낼 것이다. 아울러 생활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전남과 광주의 교통망이 통합돼 광역철도와 도로망이 촘촘해지고, 교육·의료·문화 인프라를 중복 투자 없이 효율적으로 배치해 시·도민 누구나 수준 높은 복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 행정통합으로 광주로의 쏠림 현상이 일어난다고, 전남에서도 특히 동부권은 후(後) 순위로 밀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데.

△ 전남 동부권 시·군민이 느끼는 우려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며,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동부권이 소외되지 않도록 앞장섰다. 우선 통합특별시의 청사 운영에서 '전남동부청사, 무안청사, 광주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한다'고 법에 명시했고, 특히 전남동부청사를 법조문 맨 앞에 뒤 중요성을 강